10년간 낙찰가 미리 빼내고 조작해도 한전은 몰랐다

광주지검 '한전 입찰 비리' 수사 결과 보니

조작총책·브로커 등 133건 2709억 불법 낙찰
26명 기소·1명 수배…수수료 떼먹고 부실 공사
한전, 45건 계약 취소하고 대규모 징계 착수

지난 2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허술한 입찰 시스템 문제가 드러난 이후 검찰이 약 3개월에 걸쳐 대대적으로 입찰 관련 비리를 수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0년 간 2709억원 규모의 전기 공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낙찰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수수료만 떼먹고 하청업체들에게 넘기면 이들은 부족한 전문 인력·장비 등을 메꾸기 위해 자격증과 장비를 빌려와 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실한 구조가 10년 째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에도 한전은 전혀 파악조하 못하는 등 무능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전 KDN 파견업체 직원 등 23명 구속=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1일 한전 입찰 시스템 조작 비리 사건과 관련, 26명(구속 23명)을 재판에 넘기고 달아난 1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긴 26명은 한전 KDN 파견업체 전 직원 박모(40)씨 등 4명(구속), 주모(39)씨 등 알선 브로커 3명(구속), 이모(54)씨 등 공사업자 20명이다. 지난 2월 파견업체 전 직원 4명과 브로커 2명 구속 이후로는 2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들이 한전의 입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33건(계약총액 2709억원)의 공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통하면 틀림없다더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광주·전남 뿐 아니라 인천, 대구, 경기, 충남 등의 전기 공사 업체들도 이들과 접촉, 낙찰가를 사전에 알아내 공사를 수주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조작책들이 이들에게 받아 챙긴 돈만 83억원에 달했고 공사조차 하지 않고 알선해주는 대가로만 브로커들이 챙긴 금액도 53억원에 이르렀다.

한전 전기 배전공사의 경우 한 번 입찰로 향후 2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 낙찰을 받은 뒤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전기 업계에서는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검찰은 "하도급 업체의 이익률을 10% 수준으로 추산하면 원가의 60~70% 비용만으로 공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기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전, 불법 낙찰 45건 계약 취소, 40명 징계=한전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불법 낙찰을 받아 공사가 진행중인 700억원 규모 45건의 계약을 전면 파기하고 조속히 재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한전은 이미 검찰 중간 수사 발표 과정에서 불법 낙찰 연루 여부가 드러난 8개 업체(15개 공사)와의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 2년 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최근까지 고수했던 '최종 확정 판결 전 재입찰 불가 방침'을 바꿨다는 점에서 국내 최대 공기업이 협력업체의 비리 연루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지위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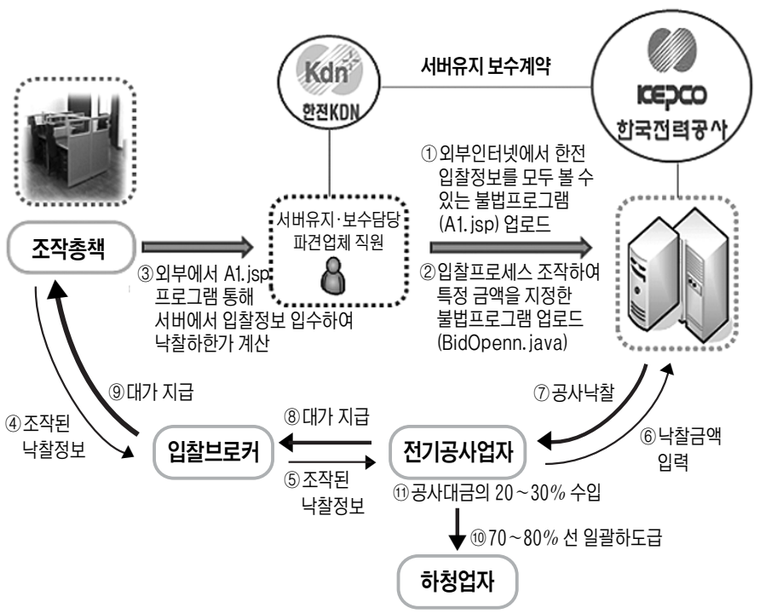
한전은 또 입찰 시스템 조작 비리와 관련, 부실한 입찰·계약·공사 관리 등의 책임을 물어 처장급 1명 등 정직 2명, 감봉 4명, 견책 8명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26명을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다. 한전 KDN측도 19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대검에서 추진하는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지역 최초로 도입, 한전·자치단체·전기공사협회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관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단속 및 불법 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한전 측은 입찰 시스템 조작 비리 사건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계량화하기 힘들지만 불법 낙찰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재입찰 비용(9000만원 수준) 등을 계량화해 KDN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불법낙찰 사건 개요도



공유수면 불법매립 업체 부실 조사 공무원 입건

고흥경찰은 21일 공유수면(바다)을 불법매립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흥군청 공무원 김모(48·6급)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 해당 공유수면 인근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A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사실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공무원 김씨 등은 폐석을 운반하는 A업체가 고흥군으로부터 허가받은 금산면 어전리 인근 공유수면 1200㎡(360평)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증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고서도 현장 확인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의 비위행위는 A업체 대표가 한 달 사용료 400여 만원을 받고 또 다른 업체에 공유수면을 빌려준 뒤, 두 업체간 고소 사건이 일어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 점·사용권을 취득한 업체가 사용권을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취업 미끼 사기 60대 구속

광주남부경찰은 21일 대기업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식당에서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조모(57)씨에게 33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수년 전 사업에 실패한 사실을 숨긴 채 지인의 소개로 조씨를 만난 뒤 '광주에 있는 대기업 간부들과 친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해당 기업과는 무관하고 간부들과의 인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웅기자 pboxer@

파견업체에 놀아난 일류 공기업의 '삼류 시스템'

한전 허술한 입찰 시스템

연간 4조원 규모 관리 맡겨
추첨번호 순열 조정 등 조작
비리 감시·통제는 유명무실

검찰의 한국전력 입찰 시스템 조작 비리 사건 수사는 일류 공기업의 '삼류' 입찰·계약 관리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전의 비리 관리스시템은 10년간 온갖 불법 비리가 벌어졌음에도, 검찰 수사 때까지 파악조차 못하는 등 '먹통' 수준에 머물렀다. 한전의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며 설립된 한전 KDN은 일개 파견업체에게 연간 4조4000억원 규모의 입찰 시스템 유지·보수 권한을 고스란히 맡겨놓으면서도 내부 비리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은 유명무실했다.

한전은 모든 입찰을 전자방식으로 하는데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범위(±2.5%) 등 기본 사항을 적어 공고한다.

입찰 시스템 서버는 투찰 마감 하루 전 오후 4시께 기초금액의 ±2.5% 범위에서 1365개의 예비가격을 만들어 이 가운데 15개를 임의로 선택, 암호화한 뒤 15개 추첨번호에 하나씩 배정한다.

입찰자는 기간 중 시스템에 접속, 15개 중 4개의 추첨번호를 선택하고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추첨번호 4개에 배정된 예가를 평균해 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한 뒤 투찰률(공사액 10억원 미만 87.745%, 10억~30억원 86.745%)을 곱한 낙찰 하한가가 산정된다. 낙찰 하한가와 가장 근접해 그 이상 투찰가를 입력한 입찰자가 최종 낙찰되는 방식이다.

전기공사업계에서 특정 업체가 2곳만 낙찰되더라도 '로또'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같은 시스템의 복잡함 때문이다.

투찰 가격을 높게 쓰는 것과 낙찰되는 것이 무관해 한전측도 애초 전기업계에서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도 이같은 점을 내세워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리 연루업자들은 15개 추첨번호를 무작위가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배정되도록 순열을 조정하는가 하면, 추첨번호 4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낙찰 하한가를 예측하거나 집이나 개인 사무실에서 한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기도 했다. 한전은 이같은 시스템을 관리하면서도 외부 인터넷망에서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조차 없었고 전자 시스템에만 의존, 적격심사·공사관리·감독을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한전이 무능한 시스템만 믿는 사이 알선 브로커와 조직책은 앉아서 낙찰가를 흘려주고 136억원을 받아 호사스런 생활을 했고 '로또'에 비유될 정도로 확률이 낮은 공사를 불법적 방법으로 30건이나 낙찰 받는 업체도 생겨났다.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 이번 사건은 한전의 부실한 입찰·계약·공사관리 시스템이 한전 KDN 파견업체 직원 등 내부자의 도덕적 해이, 브로커, 업자의 결탁과 맞물리면서 발생했다"고 규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윤장현 시장의 '통 큰 결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월분 60억도 긴급 지원

광주교육청 요청에 지급

광주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보육료 3·4월분 120억원에 이어 5월분 60억원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자 윤장현 광주시장이 '통큰 결정'을 한 것이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를 내려주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이 5월분 보육료 60억원을 광주시에 긴급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광주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1·2월분만 편성해 바닥나자 광주시는 3·4월 두달치 보육예산 120억원을 교육청을 대신해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2만여명의 누리과정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교사 급여 및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서였다. 특히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해 광주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윤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이뤄졌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주 초 정부로부터 목적예비비를 배분 받으면 추경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음달 1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은 3개월분 120억원을 즉각 상환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광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724억원 중 목적예비비 144억원, 교부금 지방채 326억원, 지난해 쓰고 남은 잉여금 가운데 134억원 등 총 604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32억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앞두고 광주시 북구청이 21일 오전 전남대 후문에서 '공중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열고 시민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 차량 204대 과태료 부과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 204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12년 51건에서 2013년 98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204건으로 증가했다.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4만~6만원이다.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작년에 크게 늘어난 것은 2013년 하반기부터 블랙박스 동영상 등 영상증거만으로도 양보의무 위반 차량을 단속,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현장에서 양보의무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재난안전당국은 정체 도로에서도 모든 운전자들이 일제히 구조·구급·소방차량에 길을 열어주는 '모세의 기적'이 정착되도록 올해도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홍보만으로는 조기에 길 터주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어려운 만큼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5억원 짜리 참기름' 물의 나노바이오센터 연구원들

이번엔 돈받고 허위서류 만들어 국고 보조금 불법지원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국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 서류 작성을 눈감아준 연구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25억짜리 연구용 장비로 명절 선물용 참기름을 제조해 비난을 샀던 장성나노바이오연구센터 연구원들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1일 사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성나노바이오센터 연구원 문모(38)씨 등 전·현 직원 2명과 업자 김모(55)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남생물산업연구원 산하 나노바이오센터 내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지 않았으면서도 입주한 것처럼 센터 연구원들과 짜고 관련 서류를 제출, 국가로부터 창업보육 지원금 3000만 원을 타낸 혐의다.

사업자들은 보조금 신청 자격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인 점을 노리고 문씨 등의 도움을 받아 입주기업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임대료·관리비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연구원의 경우 200만원을 업자에게 받고 시제품 개발 명목 으로 사용해야 할 창업보육 지원금을 허위로 집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장성나노바이오센터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2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갓 출고된 승용차 절도범 '덜미'

쌍나팔

○…공장에서 막 출고돼 임시번호판도 부착되지 않은 승용차를 몰래 가져간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7범인 허모(43)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한 도로에 탁송기사 정모(43)씨가 세워둔 차량 운반용 카케리어차량 뒤에 주차된 20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훔친 혐의.

○…허씨는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검거됐는데, 경찰에서 허씨는 "훔친 차량을 분해하고 팔아서 돈을 마련해 일본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차량을 분해하기도 전에 잡힐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